

위원회 관련 기사모음집Ⅲ

2001년 4월 ~ 2001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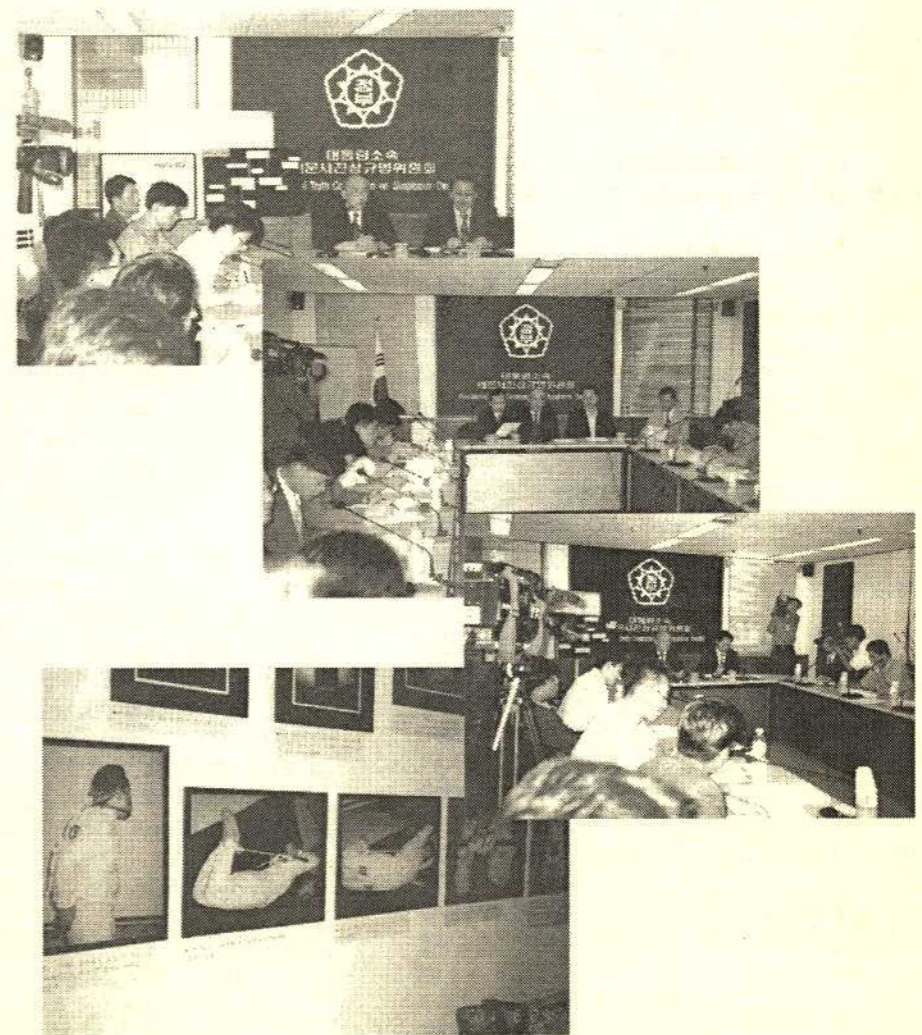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관련 기사모음집Ⅲ

2001년 4월 ~ 2001년 9월



사 레

1. 특별법 개정 관련 보도

'의문사' 규명 불응엔 사법처리 (연합뉴스 2001. 4. 27)
 여 의문사규명위 활동기간 연장 (연합뉴스 2001. 5. 9)
 의문사진상규명위 6개월간 활동 연장 (문화일보 2001. 5. 9)
 "의문사 진상규명위 활동 내년 3월 연장" (한겨레 2001. 5. 10)
 의문사규명특별법 보완 논의 (연합뉴스 2001. 5. 14)
 '의문사규명' 기간 연장해야 (대한매일 2001. 5. 14)
 "의문사 규명 강제조사 필요" (한국일보 2001. 6. 6)
 의문사유가족의 '타는 목마름' (시사저널 2001. 5. 31)

2. '진실, 의의찾기 콘서트' 관련 보도

20일 '의문사 진상규명위' 콘서트 (한국일보 2001. 5. 3)
 톱스타들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나선다 (스포츠조선 2001. 5. 4)
 노래로나마 위무됐으면 (중앙일보 2001. 5. 7)
 전인권·안치환등 참여 '진실·희망찾기 콘서트' (문화일보 2001. 5. 15)
 산자여 말하라 (한겨레 2001. 5. 15)
 이영애를 울린 의문사 어머니의 편지 (오마이뉴스 2001. 5. 21)

3. '5.18 민간인 암매장' 양심연언 관련 보도

"5.18 사살시민 암매장" 폭로 (문화일보 2001. 5. 18)
 "5.18때 30대남자 사살 암매장" (국민일보 2001. 5. 18)
 "5.18때 민간인 사살 암매장" (한국일보 2001. 5. 19)
 "5.18때 시민 사살 암매장" (대한매일 2001. 5. 19)
 "5.18때 민간인 사살 암매장" (경향신문 2001. 5. 19)
 "5.18때 시민 사살 암매장" (세계일보 2001. 5. 19)
 "민간인 사살 암매장" (한겨레 2001. 5. 19)
 "80년 민간인 사살 암매장" (조선일보 2001. 5. 19)
 "5.18때 민간인 사살 암매장" (중앙일보 2001. 5. 19)
 "5.18 민간인 사살 암매장" (동아일보 2001. 5. 19)
 만평 (동아일보/한국일보 2001. 5. 19)
 "상급부대서 사살-암매장 명령" (문화일보 2001. 5. 19)
 "민간인 사살 암매장했다" (광주일보 2001. 5. 18)
 "암매장 규명·발굴 정부 나서야" (광주일보 2001. 5. 19)
 드러난 '암매장'...철저 규명을 (광주일보 2001. 5. 19)
 "민간인 사살 암매장했다" (무등일보 2001. 5. 19)
 사실로 드러난 5·18 암매장 (무등일보 2001. 5. 19)
 "암매장 전면조사 피맺힌 한 풀어라" (전남일보 2001. 5. 19)
 '양심고백' 암매장 피살자는 박병현씨 (전남일보 2001. 5. 19)
 암매장 전면 조사해야 (전남일보 2001. 5. 19)
 Former Soldiers Confess Killing Civilians in Kwangju (Korea Times 2001. 5. 19)
 Former soldiers confess to killing of innocent civilians in Kwangju (The Korea Herald 2001. 5. 19)
 "5.18 암매장" 희생자 신원확인 (한국일보/대한매일 2001. 5. 21)
 "내 친구가 공수부대에원에 피살" (동아일보 2001. 5. 21)
 5.18 양심고백 피살자 신원 밝혀져 (중앙일보 2001. 5. 21)
 "5.18암매장" 희생자 신원 확인 (조선일보 2001. 5. 21)
 암매장 사실 밝힌 양심고백 (한겨레 2001. 5. 21)
 "5.18암매장사건" 조사여부 의문사규명위 내달2일 결정 (동아일보 2001. 5. 28)
 "5.18민간인 암매장 사건" 직권조사 다음달 2일 결정 (노동일보 2001. 5. 28)
 "직권조사 반드시 실시돼야" (무등일보 2001. 5. 28)
 5·18 암매장 즉각 조사하라 (무등일보 2001. 5. 29)

양심고백과 인간의 삶 (중앙일보 2001. 6. 1)
 의문사규명위 직권조사 놓고 혼선 (연합뉴스 2001. 6. 3)
 박병현씨 직권조사 의문사규명위 혼선 (광주일보 2001. 6. 4)

4. 박영두 사건 관련 보도

84년 청송교도소 의문사 박영두씨 "교도관 집단폭행에 숨졌다" (한겨레 2001. 6. 5)
 의문사진상규명 속도 붙었다 (한겨레 2001. 6. 5)
 84년 청송교도소 의문사 "교도관 폭행에 사망" (중앙일보 2001. 6. 5)
 교도관 집단폭행 사망확인 (조선일보 2001. 6. 5)
 "교도관 집단폭행에 사망" (대한매일 2001. 6. 5)
 "84년 청송교도소 복역 박영두씨 교도관 집단폭행 당한 후 사망" (동아일보 2001. 6. 5)
 하나씩 밝혀지는 의문사 진상 (대한매일 2001. 6. 6)
 그 죽음 앞에 멧뚥한 사람은 (한국일보 2001. 6. 12)
 의문사, 민주화운동 첫 판정 (문화일보 2001. 6. 25)
 "의문사 박영두씨 교도관에 폭행사망" (국민일보 2001. 6. 25)
 "사람 대접" 요구하자 밀실 폭행·갇은 고문 (중앙일보 2001. 6. 26)
 '의문사' 첫 타살인정 / '의문사' 조사권 대폭 강화하라 (경향신문 2001. 6. 26)
 '의문사' 타살 첫 인정 (동아일보 2001. 6. 26)
 교도소 의문사 박영두씨 민주화관련 '타살' 결론 (한국일보 2001. 6. 26)
 의문사 타살혐의 첫 인정 (조선일보 2001. 6. 26)
 의문사 첫 타살 규명 (세계일보 2001. 6. 26)
 의문사 민주화관련 타살 첫 인정 (대한매일 2001. 6. 26)
 민주화관련 '타살' 결론 (한겨레 2001. 6. 26)
 의문사 타살 첫 확인 (노동일보 2001. 6. 26)
 공소시효 지나면 별수 없다 (노동일보 2001. 6. 26)
 감호소 의문사 진실밝힌 김광섭-이상훈씨 (문화일보 2001. 6. 26)
 '공소시효'에 묶인 의문사 단죄 (오마이뉴스 2001. 6. 26)
 의문사 타살 첫 인정 (내일신문 2001. 6. 26)
 'Suspicious Death' Case Recognized as Manslaughter (Korea Times 2001. 6. 26)
 Presidential panel on suspicious deaths find beating caused death of inmate (The Korea Herald 2001. 6. 26)
 처음으로 인정된 공권력 고문치사 (문화일보 2001. 6. 26)
 청송박영두씨 고문치사 (인권하루소식 2001. 6. 26)
 반인권범죄 시효없다 (대한매일 2001. 6. 27)
 17년만에 밝혀진 의문사 진상 (동아일보 2001. 6. 27)
 '사과없는' 의문사 규명 (경향신문 2001. 6. 27)
 박영두사건 민주화관련성 논란 (연합뉴스 2001. 7. 3)
 '흉악범' 박영두의 승고한 죽음 (한겨레 2001. 7. 15)
 박영두씨 의문사 조사결과 시민단체-법무부 '갈등' (문화일보 2001. 7. 18)
 내부비리 체포 공무원에 첫 보상판결 (경향신문 2001. 7. 23)
 청송교도소 의문사 규명 체포자에 300만원 보상 (세계일보 2001. 7. 23)
 달라진 것 없는 법무부 (한겨레 2001. 7. 24)
 '죽음의 진실' 그후 (중앙일보 2001. 7. 31)

5. 장준하·김두왕·최종길 사건 관련 보도

(1) 장준하 사건 관련 보도
 장준하 선생 타살추정 단서 확보 (동아일보 2001. 6. 8)
 "장준하씨 타살혐의 질다" (중앙일보 2001. 6. 11)
 장준하 사건 어떻게 조사했나 (중앙일보 2001. 6. 11)

"장준하 타살결론" 청와대 보고 (경향신문 2001. 6. 13)
 의문사 진상규명위 "장준하 타살의혹 크다" (한겨레 2001. 6. 13)
 "고 최중길교수 억울한 죽음" 의문사규명위, 대통령에 보고 (중앙일보 2001. 6. 13)
 "장준하선생 타살 혐의 커" (대한매일 2001. 6. 13)
 "장준하·최중길씨 타살혐의 질다" (한국일보 2001. 6. 13)
 의문사규명위 장준하·최중길 타살추정 배경 (한국일보 2001. 6. 13)
 의문사 진상 반드시 밝혀야 (한국일보 2001. 6. 14)
 의문사규명위에 힘 실어주자 (한겨레 2001. 6. 14)

(2) 김두환 사건 관련 보도

5공 군의문사 타살사사 물증 발견 (연합뉴스 2001. 6. 8)
 "군의문사 김두환씨 유서는 친구필적" (국민일보 2001. 6. 8)
 "군의문사 김두환씨 유서는 친구필적" (중앙일보 2001. 6. 9)
 군의문사 대학생 타살 증거 발견 (한겨레 2001. 6. 9)
 '군의문사' 18년만에 제조사 (세계일보 2001. 6. 9)
 자살 처리된 5공 군의문사 타살 암시 물증 최초 발견 (노동일보 2001. 6. 9)

(3) 최중길 사건 관련 보도

"의문사 최중길씨 '간첩자백' 사실과 달라" (연합뉴스 2001. 8. 20)
 의문사 최중길교수 증정발표 허위 (국민일보 2001. 8. 20)
 의문사 최중길교수 '간첩' 자백 안했다 (문화일보 2001. 8. 20)
 의문사 최중길교수 간첩자백 안했다 (중앙일보 2001. 8. 21)
 최중길교수 '간첩' 자백 조작 (한겨레 2001. 8. 21)
 "고문 타살 가능성" (한국일보 2001. 8. 21)
 의문사 최중길 교수 '간첩자백' 없었다 (동아일보 2001. 8. 21)
 최중길교수 증정서 고문 '간첩자백' 사실과 달라 (대한매일 2001. 8. 21)
 "의문사 최중길교수 간첩자백 안했다" (조선일보 2001. 8. 21)
 최중길교수 '간첩자백' 없었다 (경향신문 2001. 8. 21)
 "의문사 최중길교수 간첩자백 한적없다" (세계일보 2001. 8. 21)
 최중길 교수 '간첩자백' 사실과 달라/타살여부 확인이 열쇠 (노동일보 2001. 8. 21)

Fact About the Mysterious Death of Prof.Tsche Chong-ki Reavealed (Korea Times 2001. 8. 21)
 최교수 사인규명, 국정원 적극 협력해야 (문화일보 2001. 8. 21)
 단서 드러난 최교수 의문사 (대한매일 2001. 8. 22)
 정보기관의 가증스런 범죄 (한겨레 2001. 8. 22)
 의문사 규명 적극 협조해야 (경향신문 2001. 8. 22)

6. 김준배 사건 관련 보도

현직검사 소환-불응 진상규명위-檢 대립 (국민일보 2001. 8. 23)
 의문사규명위, 현직검사 첫 소환통보 (연합뉴스 2001. 8. 23)
 의문사규명위 출석요청 현직검사 두차례 불응 (한겨레 2001. 8. 24)
 의문사규명위, 현직검사 소환통보 (동아일보 2001. 8. 2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현직검사 첫 소환통보 (노동일보 2001. 8. 24)
 현직검사 의문사규명위 소환불응 (내일신문 2001. 8. 24)
 '의문사 조기종결' 연루 현직부장검사 소환불응 (세계일보 2001. 8. 24)
 현직검사 첫 소환통보 (대한매일 2001. 8. 24)
 의문사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검사 (한겨레 2001. 8. 25)
 검찰 의문사규명에 협조해야 (세계일보 2001. 8. 25)
 의문사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노동일보 2001. 8. 25)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구타 사실 밝혀져 (연합뉴스 2001. 9. 3)
 경찰 97년까지도 '학원프락치' 활용 (연합뉴스 2001. 9. 3)
 "김준배씨 사망전 경찰이 구타" (문화일보 2001. 9. 3)
 '97년 의문사 대학생 추락후 구타' (국민일보 2001. 9. 3)
 "의문사관련 폭행경찰 고발 방침" (동아일보 2001. 9. 4)

"경찰이 폭행" 고발 검사엔 동행명령장 (중앙일보 2001. 9. 4)
 97년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 구타사실 드러나 (한겨레 2001. 9. 4)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이 구타 (대한매일 2001. 9. 4)
 "97년 의문사 학생 경찰이 구타" (경향신문 2001. 9. 4)
 의문사규명위-검찰 대립 (한국일보 2001. 9. 4)
 "추락사 광주대생 경찰구타도 원인" (조선일보 2001. 9. 4)
 97년 의문추락사 김준배씨 '사망전 경찰이 구타' 밝혀져 (세계일보 2001. 9. 4)
 문민정부 때도 '학원프락치 공작' (노동일보 2001. 9. 4)
 "당시 검사 15일까지 동행명령 집행" (내일신문 2001. 9. 4)
 김준배씨 사망사건 제조사 진상위 주장에 검찰 반박 (문화일보 2001. 9. 4)
 의문사위-법무부 힘겨루기 양상 쓸쓸 (국민일보 2001. 9. 4)
 의문사 김준배씨 수사 검사 진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 (대한매일/동아일보 2001. 9. 6)
 "김준배씨 사망" 당시 검사에 동행명령장 (조선일보 2001. 9. 6)
 김준배씨 사건 다시 조사한다 (노동일보 2001. 9. 6)
 '김준배씨 의문사' 수사검사 진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 (한국일보 2001. 9. 6)
 김준배씨 의문사수사 당시 검사에 동행명령 (세계일보 2001. 9. 6)
 베일 벗은 '대선 전야 의문사' (시사저널 2001. 9. 13)
 의문사 김준배씨 후배 양심선언 (연합뉴스 2001. 9. 6)
 의문사 김준배씨 후배 '문민 프락치' 양심고백 (한겨레 2001. 9. 7)
 "김준배씨 은신처 경찰에 알려줬다" (세계일보 2001. 9. 7)
 "의문사 김준배씨 은신처 경찰 항응받고 알려줬다" (경향신문 2001. 9. 7)
 의문사 관련자 첫 양심선언 (대한매일 2001. 9. 7)
 의문사 김준배씨 '프락치 공작' 후배 양심선언 (노동일보 2001. 9. 8)
 진상규명위에 맞서는 검사 (대한매일 2001. 9. 7)
 어떤 악연 (한국일보 2001. 9. 10)
 민변 "조사협조" 촉구 (한국일보 2001. 9. 11)

7. 기타 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 (동양/월동평가)

의문사사건 단순사고사로 첫 종결 (2001. 5. 3)
 [인터뷰] 발족 6개월만에 1건처리...의문사규명위 양승규 위원장 (조선일보 2001. 5. 7)
 의문사 진상규명 지지부진 (동아일보 2001. 5. 17)
 공안기관 '무성의 여전' (한겨레 2001. 5. 14)
 "의문사 규명위에 수사권 부여할" (대한매일 2001. 5. 26)
 "의문사 확인불가 국정원이 최다" (연합뉴스 2001. 6. 7)
 일부 의혹 실체 접근 성과 (대한매일 2001. 6. 7)
 타살 드러나는 의문사 많다 (내일신문 2001. 6. 7)
 의문사규명위 조사기간 연장 7건 (연합뉴스 2001. 6. 12)
 김태동명 '개혁3일법' 위원들 격려 (한겨레 2001. 6. 13)
 [연재] 파문된 진실...의문사규명 어디까지 (노동일보 2001. 6. 25/27/29)
 [인터뷰] "역사 진실찾기로 과거와 화해해야" (시민신문 2001. 7. 2)
 의문사 규명위 심각한 내분 (조선일보 2001. 7. 13)
 의문사규명위 안팎 시련 (한겨레 2001. 8. 29)
 "기대는 높고, 의문은 깊고..." (월간 참여사회 2001. 6)
 의문사, 드러나는 진실들 (주간조선 2001. 6. 7)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광섭씨 (스포츠서울 2001. 7. 14)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렇게 움직인다 (일요신문 2001. 7. 15)
 의문사규명 나선 현직 검사 (대한매일 2001. 6. 28)
 의문사규명위 군의문사 2건 기각결정 (연합뉴스 2001. 9. 23)
 군 의문사 2건 단순사고사 결론 (세계일보 2001. 9. 24)
 진실에 대한 검찰의 의무(한겨레 2001. 9. 25)

특별법 개정 관련 보도

• 정당/선거

'의문사' 규명불응땐 사법처리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 앞으로 의문사 관련자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진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27일 민주당 김종권(金重權) 대표의 방문을 받고 위원회 업무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가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 의문사 관련자가 위원회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절차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고,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조사기능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오는 10월까지로 돼 있는 위원회 활동 시한을 2002년 1월까지 연장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후 2개월이내에 수사를 종결,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서면통지토록 하고 있다.

의문사 관계자는 '의문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공소시효를 넘긴 20~30년전의 일이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 관련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이라며 '실질적인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이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양 위원장의 특별법 개정 요청에 대해 '위원회 활동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원칙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은 앞으로 당 인권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minchol@yna.co.kr (끝)

• 정당/선거

여 의문사규명위 활동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고희규기자= 민주당은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 활동기한이 진정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보고 길게는 내년 3월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현행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족한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되 3개월간 1차 기간연장이 가능했으나 향후 두차례 더 3개월씩 모두 9개월간 추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인권특위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당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문사진상규명위 멤버들과 만나 조사기간 부족, 조사권한 제약 등 각종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런 방향으로 특별법을 고쳐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상규명위가 참고인의 불출석과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규정이 정해지지 않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도 정해지지 않는 등 조사권한 제약도 많다고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함에 따라 법 개정시 이 부분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특별법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6개월간(1회에 한해 3개월연장 가능) 조사활동을 벌인 뒤 그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이 나 각군 참모총장에게 고발.수사요청을 하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지금까지 모두 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이 접수된 사건중 83건을 조사중이며, 1건에 대해서만 사고사로 사인이 결론난 만큼 나머지 접수건의 처리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khg@yna.co.kr (끝)

의문사 진상규명위 6개월간 활동 연장

민주당, 법개정 추진

민주당은 대통령직속 특별기구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시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현행법상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 인권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9일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다"면서 "최대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태기자 strato1@munhwa.co.kr

“의문사 진상규명위 활동 내년 3월 연장”

민주당, 특별법 개정 추진

민주당은 9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부족하다고 보고, 길게는 내년 3월까지 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걸 민주당 인권특위 위원장은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현행법으로는 1회에 한해 3개월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3회로 조정해 모두 9개월 동안 추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진상규명위의 건의 사항인 △참고인의 불출석과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정 등의 조항도 법개정 과정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의문사규명특별법 보완 논의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국회인권정책연구회(대표 이미경의원)는 1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강화와 활동시한 연장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연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불출석 및 참고인의 진술의무조항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주체를 지정하는 등 행정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내년 2월까지인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문제 등을 토론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영진(金泳鎭) 박인상(朴仁相) 장영달(張永達) 이종걸(李鍾杰)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 박정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장, 황인성 의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mangels@yna.co.kr

(끝)

'의문사 규명'기간 연장해야

지난해 10월 발족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민주당이 위원회 활동기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기회에 기간연장 말고도 조사권 확대 등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 의문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법대로라면 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9개월간 가동하며 3개월동안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또 50명에 불과한 조사관들이 발생한 지 20~30년 된 사건 80여건을, 공권력을 상대로 조사하게 돼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기껏해야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든지, 허위진술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등 위원회의 조사기능은 현재 아주 미약하다. 실제로 지금 위원회가 조사하는 의문사 가운데 결과가 나온 사례는, 1982년 3월 서울 삼성교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신영수씨(당시 건국대생·21)사건을 단순사고로 처리한 것뿐이다.

해방후 우리 사회는 '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문제를 청산하려다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 이번에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활동을 접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과거에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로 끝나고 말 것이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해 지금 이 사회의 초석을 이룬 이들의 명예는 다시금 회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 여야의 당리당락이 작용할 까닭은 없다고 믿는다. 여야 정당은 의문사 진상규명의 당위성을 공감해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지난 9월에는 김대중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진상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정부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기관은 그 뜻을 이해해 진상밝히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가 테러리즘에 희생된 의문사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다. '민주화 공과(功過)'를 다음 세대에게 판단하게 할 수는 없다.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목적인 바를 이루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의문사 규명 강제조사 필요”

강제구인·위증처벌 포함 규명위 “특별법개정 추진”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5일 증인을 강제구인 및 강제 조사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의문사 조사상황 중간 브리핑'을 갖고 "짧은 조사 기한과 강제 조사권 결여로 의문사 규명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규명위 출범 초기부터 "조사권한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제기해 온 상태여서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규명위 고위 관계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6개월 조사후, 필요시 3개월 연장도록 돼 있는 규정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대상자의 소환 불응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또 증인들이 위증을 한 경우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위증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규명위는 5월1일 현재 81건의 의문사 대상사건을 접수, 1,216명의 관련자 및 참고인 조사와 85회의 현지조사를 실시, 50%가량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한마음: '한울실'이라는 유가협 사무실의 벽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진 희생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다.

의문사 유가족의 ‘타는 목마름’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 짧고 조사권 미약해 ‘진실 확인’ 난망... ‘특별법 개정’ 요구

고재규 기자 unjusa@e-sisa.co.kr

지난 5월16일 오후 3시 김용문씨(54)는 회사를 조퇴하고, 서둘러 서울역으로 향했다.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자 김씨는 어깨를 둘러메고 유인물을 챙겼다. 그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되풀이됩니다." 지난 3월21일부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서울역 광장에서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벌이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김씨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활동이 한창인데, 김씨는 왜 거리에 나선 것일까? 진상규명위는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1월부터 본격

적인 활동에 들어간 위원회는 오는 6월이면 양상석씨 사건을 시작으로 1차 조사 기간이 끝난다. 진상규명위는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한 차례(활동 시한 3개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 접수된 83건 중 2건 처리

그런데 1차 조사 시한이 임박하면서 진상규명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사관 53명이 최대 9개월 동안(연장 3개월 기간 포함) 83건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사권도 미약하다. 중요한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백22일 동안 국회 앞

에서 농성을 벌이며 의문사특별법을 쟁취했던 유가협 회원들은 팔짱만 끼고 지켜볼 수 없었다. 유가협은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다시 법 개정(38쪽 표 참조) 캠페인에 나선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유가협 회원 이계남씨(69)는 "이번에도 계대로 못 밝히면, 우리는 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한다. 대부분이 60~70대인 데다 대통령 직속기구도 밝히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진상 규명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가협이 진상규명위에 거는 기대는 절박하다.

진상규명위는 접수된 83건 가운데 지금까지 공식으로 2건을 처리했다. 행불자였던 박태순씨의 죽음을 확인했고, 1982년 3월에 숨진 신영수씨는 단순 사고사로 판명했다. 박태순씨 사건은 공안기관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진상

규명위는 지난 4월30일에 예정된 중간 발표를 취소했다.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진상규명위 활동이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자 유족들이 나서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김용문씨는 유가협이 젊은 피다. 김씨는 아버지의 사인을 규명하려고 거리에 나선 경우다. 김씨의 아버지 김창수씨는 1971년 5월2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 전남 목포시



“의문사특별법 고쳐라”: 지난 3월21일부터 유가협은 다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거리 서명에 나섰다.

대성동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 부정 선거 시비로 경찰관 2명과 서울로 조사 받으러 가다 김씨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경찰은 김씨가 기차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는 경찰을 피해 탈출하다 숨졌다고 수사 결과를 네 차례나 반복했다. 당시 스물네 살이던 김용문씨는 언젠가는 아버지가 죽은 원인을 밝혀준다는 심정으로 10원짜리 우표가 붙은 목포경찰서의 통지서부터 신문 기사까지 관련 자료를 장롱 깊숙이 간직했다가 지난해 말 진상규명위에 제출했다.

군의문사 유가족들도 유가협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 기무사는 여전히 홈페이지에 '사건 현장 검증, 유족 입회하 부검 결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하게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라

며 1980년대 '녹화사업'에 따른 의문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수사권도 없는 조사관들이 과연 실제 기관원들의 입을 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유가족을 다시 결함시키고 있다.

유가협 허영춘 의문사 지회장은 만일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군대 안 보내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한다. 허씨의 아들 원근씨는 1984년 4월 2일 왼쪽 가슴에 한 발, 오른쪽 가슴에 또 한 발, 다시 머리에 한 발 모두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다. 누가 보아도 자살이라고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도,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몰아붙였다(군 당국의 말대로라면 머리에 총을 맞고 100m를 달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허씨는 그래도 싸울 수 있는 부모는 행복하다고 위안한다. 자식의 한을 가슴에 묻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자식 잃고 실명한 어머니, 끝내 자살

지난 4월23일, 유가협 회원 이명률씨(79)는 자식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눈을 감으면서도 이씨는 3대 독자였던 이운성씨를 잊지 못했다. 성균관대 81학번인 이운성씨는 1982년 11월3일 가두 시위에 나갔다가 연행되어 강제로 징집되었다. 제대 1주일을 앞두고 이씨는 싸늘한 시신

으로 발견되었다.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월북 혐의로 보안사 조사를 받다가 비관해 자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 방송국의 도움으로 자식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쫓던 중 헌병대의 수사 기록이 조작되었음이 이명률씨는 확인했다. 3남 1녀의 막내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최우혁씨의 어머니 강연임씨는 서울대 운동권이었던 아들 최씨를 휴학시키고 1987년 군대에 보냈다. 군대에 보내면 데모를 그만두겠거니 하는 심정에서였다. 그러나 1987년 9월 최씨는 새까맣게 불에 타 숨졌다. 군 당국은 분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강씨는 자책했다. “내가 아들을 죽였다. 군대에만 보내지 않았어도...” 그해 11월 강씨는 충격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고 정신을 놓아버렸다. 1991년 2월19일 강씨(당시 59세)는 한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임본이씨(68)는 아들 사진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이계남씨(69)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부적처럼 가지고 다닌다. 장동재씨(66)는 제보 전화라도 올까 봐 12년 동안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사할 때마다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이 한결같이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긴다.

이같은 유가족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가운데 진상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6월쯤이면 발로 댄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그렇지만 황국장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문사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문사 특별법,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현행	유가협 개정안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뒤 6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뒤 9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2회에 한하여 1회당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 사유가 발생할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 내에서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사건 진상을 밝힌 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관련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허위 자료 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의 부과 주체와 절차가 없어 유명무실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할 수 있다

‘진실, 희망찾기 콘서트’ 관련 보도

20일 '의문사 진상규명위' 콘서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의문 속에 사라져 간 사람들의 죽음을 규명하는 일에 가수들이 나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4개 종단인권위원



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실, 희망찾기 콘서트-산 자여 말하라'를 개최한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가수 전인권(사진), 정태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치환과 자유, 이은미, 강산에, 박혜경, 서문탁, 성시경 등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대에 오르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명예조사관인 영화배우 송강호와 이영애, 의문사 관련 가족 83명 등이 특별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 수익금은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제보를 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사용된다. (02) 737-3313.

톱스타들, '진실, 희망...콘서트'

톱스타들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나선다

송강호 이영애 전인권 강산애 박혜경 등
20일 세종문화회관서 '진실, 희망... 콘서트'



◇ 박혜경



◇ 송강호

송강호 이영애, 전인권 강산애 박혜경 등 톱배우 톱가수들이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규모 콘서트를 연다.

오는 20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진실, 희망찾기 콘서트'.

부제를 '산자여 말하라'고 정한 이번 콘서트는 제3공화국 시절 장준하 선생 등 과거 독재정권하에 '의문의 죽음'으로 남아있는

분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루어졌다. 의문사의 진상을 알고있는 사람들의 제보나 양심선언을 촉구하는 뜻도 공연취지에 포함됐다.

배우 정진영의 사회로 진행되는 콘서트는 전인권, 정태춘, 노찾사, 안치환과 자유, 이은미, 박혜경, 서문탁, 성시경 등 인기가수들이 무대에 오르며, 특히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중립국의문사감시요원 역할을 맡았던 이영애와 북한군 장교로 열연한 송강호가 특별 출연한다. 출연자들은 모두 불의를 파헤치고 진실을 밝히려는 콘서트 의미에 따라, 노래런티로 출연기로 했다.

83인의 의문사 관련가족들도 초대할 이번 공연은 KNCC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이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후원한다. 공연수익금은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후, 의문사 제보나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사용된다.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02)737-3313

< 이준형 기자 rock@ >



최씨의 노래누리

노래로나마 위무됐으면...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호상(好喪)이라는 말은 남은 자를 위로하고 가는 이를 편안케 하기 위해 옛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의의 거짓 단어입니다. 아무리 호상인들 상주가 울지 않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많은 이들이 죽음의 사유에 의혹을 품고 기막힌 죽음을 어쩔겠습니까. 때때로 시간이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얼마전의 일입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됐던 시절이 세상 생생합니다. 다만 세월은 흐르고, 기억은 덧없으며, 일상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 삶이니 아직도 억울함을 사하지 못해 거리에 나서는 억울한 죽음의 가족들에게 민망할 뿐입니다.

그 죄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요. 일요일인 오는 20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당에서는 뜻있는 공연이 열립니다. '진실, 희망 찾기 콘서트'. 산자여 말하라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truthfinder.go.kr)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돕기 위해 원불교·개신교·천주교·불교 4개 종단의 인권위원회가 마련했습니다.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는 지난 권위주의 시절, 독재 정권 아래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억울하게 죽어간(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신원(伸寃)을 맡은 기구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족돼 죽음에 의혹이 있는 83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활동 중입니다.

그 가운데는 유신 철폐에 앞장서다 산에서 죽은 장준하 선생, 민주화와 통일을 외치다 제주지에서 숨진 이철규 전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의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는 죽음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 어디 그리 간단하겠습니까. 다만 남은 자들이 이런 노력이나 했다는 사실이 먼저 간 이들을 위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연료도 받지 않고 가까이 무대에 서는 가수들, 전인권·정태춘·안치환·이은미·강산애·서문탁·박혜경·성시경씨 고맙습니다. 노래가 힘이 될 때, 원한은 용서로 변할 것임을 믿습니다. 1588-7890, 02-737-3313.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진실... 콘서트' 20일 열려

전인권·안치환등 참여 '진실·희망찾기 콘서트'

의문사진상규명 홍보위해

20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공연 '진실, 희망찾기 콘서트'에 전인권·안치환·강산에·이은미 등의 가수가 참여한다. 이 공연은 지난해 10월 의문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작업,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가 후원하는 행사다. 박해경·서문탁·성시경 등 신세대 가수도 출연하는 이번 콘서트에는 지난 3월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명예조사관으로 위촉된 영화배우 이영애와 송강호가 특별 출연해 국민의 관심을 호소할 예정이다. 모든 가수가 무료로 출연하고, 수익은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1588-7890

아침햇살

김효순 논설위원



산자여 말하라

암울한 시절 의문의 죽음을 당했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정국해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발족한 지도 곧 7개월을 넘기게 된다.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지난해 10월17일 문을 연 의문사규명위는 그동안 접수된 의문사 사건 84건을 두고 조사를 벌여왔으나,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규명위의 인터넷 홈페이지(truthfinder.go.kr) 사이버광장에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둘러 의문사의 진실이 '괴물' 밝혀져야 한다는 글을 남겨놓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사건 해결에 중요한 재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금이 나오게 되 있는데, 알맹이 있는 재보는 많지 않은 듯하다.

어려움 많은 의문사 규명위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자, 사회 일각에서는 비난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돈만 쓰고 하는 일이 없다든지, 결국은 좌절과 냉소만 남기고 해체될 것이라는 비아냥이 그것이다.

그러나 규명위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리라는 것은 이미 기구가 틀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조사의 실마리가 되는 기본 여건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현장이 없다. 사건이 일어나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 과제이나, 접수된 사건에는 현장이 없다. 설사 있더라도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남아 있을 리가 없다. 둘째, 목격자가 없다. 의문사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졌을 개연성이 높아 사건에 직접 간여했거나 내막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돼 있을 것이다. 셋째, 기록이 없다.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 인근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장준하 전(사상계) 발행인의 사건 처리 보고서조차 동두천경찰서, 의정부지청에도 없는 상태다. 서류보존 시한이 지났다는 것이 이유다. 규명위에서 관계기관을 통해 옛 중앙정보부에 있던 '장준하 파일'을 요청했으나,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답신만 돌아왔다고 한다. 당시 재야인사

로서는 가장 지명도가 높았던 사람의 하나인 장준하씨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면, 무명의 노동운동가, 학생들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규명위의 약점으로는 강제수사권과 사면권이 없는 점이 지적된다. 배속된 조사관들은 관련자들을 일일이 찾아내서야 하며, 이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해도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 남아공의 소수 백인정권 아래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구성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일단 진상을 고백하고 참회를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을 썼다. 규명위가 시한부 기관이라는 점도 사건해결의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의문사 사건은 접수된 지 6개월 안에 일차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밝혀져 왔던 사건들이 9개월 안에 큰 가닥이 잡히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관련 재보 줄이기 기대

조사활동의 성과가 아직 부진한 것은 현정권의 정체성 논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수립 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과연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 교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사 관련 사건은 '백경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노태우 폭압정치' 아래서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사건들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공동정권의 간판이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판국이니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규명위 활동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해도 별다른 반향이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4개 종단 인권위원회가 의문사규명위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한 '진실 희망찾기 콘서트, 산자여 말하라'가 20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규명위 활동의 의미가 일반에게 널리 전해져 중요한 재보가 줄을 잇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hyoskim@hani.co.kr

이영애 올린 의문사 어머니의 편지

세종문화회관의 <임을 위한 행진곡> 3차

홍성식 기자 hss@ohmynews.com

'믿음'에서 '희망'...그리고 '진실'로

발단은 이영애(텔런트)의 눈물이었다.

이씨는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시절 의문의 죽음을 당한 대학생의 어머니가 이미 지상의 사람이 아닌 아들에게 보내는 '부칠 수 없는' 편지를 대독하고 있었다. 미문(美文)도 명문장도 아니었지만, 자식을 비명에 보낸 어머니의 사연은 구구절절 관객들의 목을 메이게 했다.



▲ '의문사 진상규명위' 명예조사관 이영애

편지의 끝 부분. '아들아, 너를 살려내라고 거리를 떠돌다 연행이 되기도 했고, 유치장에서 구류도 살아왔다. 그러나 네가 살아 있는 곳은 이 엄마의 가슴 속뿐, 아무리 아픈 울음 끝에도 너는 돌아오지 않더구나...'에 이르렀을 때 이영애가 낭송을 멈추었다. 한참의 침묵. 이씨는 울고 있었다. 손수건을 꺼냈고, 코를 훌쩍였다.

아무도 이영애의 눈물을 필요에 의한 '연기자의 연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관객들은 믿고 있었다. 그 눈물은 '야만의 시대'에게 아들을 뺏긴 어머니의 슬픔에 동화되어 나온 것이라고. 그 '믿음'을 디딤돌 삼아 안치환이 무대로 등장했다.

그가 묻는다. "자유란 무엇인가? 진정 자유로운 자는 누구인가?" 살아있는 내내 온몸으로 압제와 맞서다 94년 타계한 남민전의 시인 아니, 전사(戰士) 김남주가 답한다. "만인을 위해 일하고 싸우는 것이 자유라고" "피와 땀 흘려(그들과)함께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인"이라고. 김남주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 <자유>가 안치환 특유의 절절한 목소리로 불려졌다.



▲올해 5월 광주공연에서의 안치환 ©모철홍

이어지는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관객들이 안씨와 입을 맞춘다. 우리에게 찾아야 할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진정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 '진실'과 '희망'을 거부와 저항에서 찾고 있는 전인권이 암전을 깨뜨리며 나타났다.

무대 전면에 마련된 유가족들의 좌석을 바라보던 그가 관객에게 권유한다. "아직도 자식과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 의문사 유가족들을 위로한다는 뜻에서 우리 일어설까요?"

세종문화회관 3000여 좌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모두 일어섰다. 3000명이 하나의 목소리로 부르는 <사노라면>. 그 장중한 합창은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이어졌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의 전인권 ©노순택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거꾸 3번이나 목 메이게 불려졌다. 무대에 오른 100여 명 의문사 유가족은 물론, 1층과 2층, 3층의 관객 모두가 주먹 쥐 오른손을 하늘로 뻗쳐 올렸다. 오페라와 클래식 공연장으로 주로 쓰이는 이 곳에서 그런 '생경한 장면'을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모든 장면이 펼쳐진 곳이 어디냐고?

2001년 5월20일 저녁이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마련한,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진실, 희망찾기 콘서트>였다.

'단죄'와 '보복'이 아닌 '진실 찾기'

이번 콘서트의 핵심어는 '진실 찾기'. 공연의 사회를 맡은 정진영(영화배우) 씨도 이를 수 차례 강조했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의 몫은 단죄와 보복이 아닌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알려내야 할 의미와 공연으로서의 완성도를 모두 갖춘 콘서트였어요"라는 30대 초반 주부관객의 말처럼, 공연의 의미를 무대에서

무한증폭시킨 김정환(총연출자)의 완급조절과 무대연출력은 돋보이는 것이었다. 김정환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비롯 '돈이 되지 않는 공연(?)'만을 단골 연출해온 젊은 베테랑.



▲<진실, 희망찾기 콘서트> 총연출자 김정환 ©홍성식

박혜경과 위퍼(weeper, 哭婢), 서문탁 등 젊은 가수들의 노래와 '신리와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의 진혼 퍼포먼스, '영코랄 어린이 합창단'의 헌정곡과 앞서 언급한 이영애의 편지 낭송, 안치환과 전인권의 등장은 김씨의 빈틈 없는 연출 아래 진행됐다.

하지만 <진실, 희망찾기 콘서트>는 연출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더 많은 공연이었다. 예기치 않은 이영애 씨의 눈물은 물론이고, 이은미(가수) 씨의 "음악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래(음악)가 억울한 죽음 앞에 선 당신들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란 진정 어린 위로.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진 관객들의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까지.

유가족들의 눈망울은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부도덕한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가해자 개인의 단죄와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들의 억울한 죽음, 그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다."

이날 '유가협 의문사지회'에서는 성명서 하나를 발표했다.

거기에는 "의문사 진상조사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문사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정부 각 행정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일부 언론사의 여론호도(국민 혈세낭비) 등의 논조를 경고한다"는 의문사 유가족의 애끓는 호소가 행간마다 절실하게 담겨 있었다.

'5.18 민간인 암매장' 양심선언 관련 보도

“5·18 사살시민 암매장” 폭로

80년 진압군 7공수부대원 첫 양심선언

4명에 총격... 의문사 진상 규명위에 제보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발 21돌을 맞은 18일 그동안 역사속에 파묻혔던 한 의문의 실종사건에 대한 진실이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한 공수부대원의 양심고백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이 부대원은 당시 민간인을 폭도로 오인,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난 88년 국회 광주청문회 당시 이 부대 부대장이던 K 중령등 당시 부대지휘관들의 “총살된 시민의 암매장 등은 없었다”는 진술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

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이날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 당시 진압군에 살해당한 55년생 한 시민의 암매장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의문사 적용 여부를 위해 기초조사를 벌이던 중 당시 7공수특전단 OO대대 소속 한 부대원이 연락을 해와 양심고백을 했다”며 “이 부대원은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며 이 부대원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확

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뒤 83건의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를 조사중인 의문사위원회에 가해자로부터 ‘양심적 제보’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양심고백을 한 A씨는 지난 80년 5월 21일 7공수여단 OO대대 부대원으로 처음 광주시에 투입돼 시외곽에서 매복을 하던 중 시를 빠져나가는 시민 4명에게 총격을 가해 이중 1명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고 고백했다.

A씨는 진술에서 자신은 당시 광주 시 조선대 교정에서 주둔하며 광주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부근에 매복 중 시민들과 마주쳤으며 시민들을 불러 세우고 행선지 등을 확인한 뒤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시민 4명은 노인부부와 남자 2명이었으며 고향인 고흥에 김매려 간다고 밝혔고 숨진 사람은 55년생이었던 것으로 뚜렷이 기억했다. 이와 관련, 지난 광주 청문회 당시 부대장이던 K 중령은 사건 당시 총살된 시민의 암매장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우연히 현장 인근에서 밭의 김을 매던 지역주민에게 목격됐으며 지역주민들과 양심고백을 한 A씨와 함께 부대 근무를 한 다른 4명의 부대원도 A씨의 고백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당시 숨진 사람의 신원은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5·18 특별법에 의해 보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직권조사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사망자의 신원확인 작업을 벌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선홍기자

shpark@munhwa.co.kr

“5·18때 30대남자 사살 암매장”

당시 특전부대원, 의문사 진상규명위에 양심선언

피해자 신원파악 주력 명예회복·보상등 방침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한 시민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이 가해자인 특전사 부대원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지게 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에 의해 살해당한 한 시민의 암매장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벌이던 중 이달 초 당

시 부대원의 양심고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7공수여단 33대대에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 80년 5월21일 광주시 노대동 노대남 저수지 인근에서 민간인 4명을 폭도로 오인해 총격을 가해 당시 25세 가량의 남자 한 명을 숨지게 한 뒤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33대대는 조선대에 주둔하다 광주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노대남 저수지 인근에 매복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나가던 시민들을 불러 세우고 행선지 등을 확인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당시 민간인들은 광주에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 고향인 전남 고흥으로 가던 남자 2명과 노부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피해자의 신원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다음주 중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뒤 명예회복과 보상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진압부대 지휘관들이 지난 광주청문회 당시 시민암매장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을 목격했던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부대원 4명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5·18때 민간인 사살 암매장”

당시 공수부대원 양심선언 의문사규명위에 첫 제보

5·18 광주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당시 공수부대원이 비무장민간인을 사살, 암매장했다는 양심선언이 발표됐다. 이는 그간 술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수부대원에 의한 비무장민간인 사살 및 암매장은 없었다”는 당시 부대장의 국회 청문회 증언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이후 가해자에 의한 양심적인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18일 “당시 공수부대원이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제보를 최근 접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7공수여단 모대대 출신 40대 남자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 이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80년 5월22일께 당시 7공수여단이 주둔중이던 주남마을 근처 광주 남구 노대동 남재저수지 부근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매복하던 공수부대원 5명이 지나가던 민간인 4명에게 총격을 가해 55년생으로 알려진 한 민간인 남자가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고흥으로 김매러 가는 중이었다”고 알려진 이들 민간인은 군인들의 “서러



의문사규명위 브리핑 18일 서울 종로서 기자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의 민간인 사살 양심선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태욱기자

라는 명령에 도망치다 총격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노부부 두 명은 체포후 석방됐고, 다른 20대 남자는 야산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중대장의 발포명령을 받고 조준사격을 가했던 이 부대원은 “사살 직후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상부에 무전으로 보고한 뒤 암매장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져 조직적인 민간인 사살과 은폐기도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사체는 1차 암매장후, 마을주민에 의해 한번 더 옮겨졌고 2~3일 뒤 가족들이 찾아와 최종 이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증언을 토대로 5·18

묘역 등에 확인 결과 현재까지 사망자는 5·18특별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 드러나 다행”

당시 시신수습 김모씨

한편 1980년 5월 당시 숨진 55년생 남자의 시신을 수습해주었던 김모(67·광주 남구 노대동)씨는 “숨진 청년이 5·18 묘지에 묻히고 유족들이 5·18 보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을 쏜 당사자가 양심 고백, 뒤늦게나마 진실이 드러나 다행이다”고 말했다.

/광주=김종구기자 sory@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5·18때 시민 사살 암매장”

당시 7공수대원 21년만에 양심 고백

“폭도로 오인 총격” 동료도 증언

의문사 규명위 “명예회복 추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8일 “지난달초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기초조사를 하던 중 당시 7공수특전여단 33대대 A씨(45)가 21년만에 사실을 밝히는 ‘양심고백’을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0년 5월 22일 오후 광주시 남구 노대동 주남저수지 근처에서

광주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 계엄군 10여명이 매복하다가 지나가던 노부부를 포함한 민간인 4명을 ‘폭도’로 오인해 총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55년생 남자로 확인된 청년 1명이 숨졌고 이 시신을 산에 끌고가 암매장하던 광경을 근처에서 밭을 매던 아주머니(55)가 목격했다고 전했다.

의문사규명위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A씨의 동료 부대원들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고백은 지난 88년 광주 청문회 당시 33대대 권모 중령 등 지휘관들의 “암

매장이 없었다”는 증언을 뒤엎는 것이다.

의문사규명위 특수조사과 김학철 과장은 “사건 발생 2,3일 뒤 숨졌던 사람과 동행했던 노부부 등 3명이 다시 와 시신을 수습해갔다는 말에 따라 이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 확실한 만큼 추후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문사규명위는 26일 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의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복심기자 youngtan@kdaily.com

“5·18때 민간인사살 암매장”

당시 공수대원 양심선언...“명령받고 발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한 부대원이 민간인을 사살, 암매장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9일 한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위원회에서 당시 부대원(44세)을 수소문해 양심선언을 받아냄으로써 밝혀졌다. 위원회는 또 다른 부대원 4명과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하고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88년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당시 진압군 지휘관들이 “양민을 살해·암매장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양심선언자는 “80

년 5월21일~22일 오후 2시쯤 현재 광주시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근처에서 자신이 속해있던 제7공수여단 33대대원들이 행인 4명에게 총격을 가했다”며 “그중 1명이 숨져 근처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사망자의 신원은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전남 고흥출신의 55년생 남자로 광주의 시계방에서 근무했으며 형이 소아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선언자는 “명령에 따라 발포를 했지만 사망자가 비무장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괴로웠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김학철 특별조사과장은 “위원회가 생긴 이래 가해자로부터 양심선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피해자

는 공권력에 의한 죽음을 당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jbravo@kyunghyang.com

“5·18때 시민사살 암매장”

당시 공수부대원 양심선언 때 복중 총격... 20代 산에 묻어

“암매장 없었다” 청문회증언 위증 파문

5·18민주화운동 21돌을 맞은 18일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한 공수부대원의 양심선언으로 당시 발생한 한 시민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이 드러났다.

특히 이 부대원이 당시 이 민간인을 총격으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1988년 광주 청문회 당시 진압군 부대 대대장동 지휘관들의 “암매장이 없었다”는 증언의 위증여부를 둘러싼

파문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이날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이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제보를 최근 받아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건발생 21년만에 양심고백을 했다”며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이 마을 사람들의 진술과 함께 양심선언을 한 남자의 동료 부대원들

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양심선언을 한 공수부대원은 80년 5월22일쯤 광주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부근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매복하던 중 지나가던 민간인 4명에게 총격을 가한 뒤 숨진 55년생 남자 시신(당시 25세·시계방 운영)을 인근 산에 암매장했다고 고백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동행했던 다른 한명의 청년과 숨진 청년의 가족 등 3명 이상이 나흘만에 다시와 시신을 수습해갔으며 고흥으로 모내기하러 가던중이라는 이 청년의 신원을 확인중에 있다”며 “이 사람의 광주민주화항쟁 참여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 확실한 만큼 추후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부대원들은 숨진 청년의 주민등록과 사살 경위등을 무전으로 대대에 보고했으나 당시 작전 일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sgt.co.kr

“민간인 사살뒤 암매장”

5·18진압 특전사 7공수 부대원 양심고백

의문사규명위 직권조사 검토... 사망자 가족들 “착잡”

5·18 민주항쟁 당시 진압군이었던 40대 남자가 민간인을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는 양심고백을 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광주항쟁 21주년인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진압군에 살해당한 한 시민의 암매장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의문사 적용 여부를 위해 기초조사를 벌이던 중, 당시 특전사 7공수특전여단 33대대 소속 한 부대원이 연락을 해와 시민 사살과 암매장 사실을 털어놓았다”며 “지난 4월 이후 기초조사를 펼친 결과 이 부대원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문사규명위 김학철 과장은 “의명을 요청한 제보자는 지난 1980년 5월21일 광주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부근에서 다른 부대원 4명과 함께 매복하던 중, 길을 지나던 민간인 4명에게 총격을 가해 가운데 20대 남자 1명을 사살했고 그 주검을 근처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숨진 시민과 동행했던 노부부 등 3명이 사흘 뒤 다시 현장을 찾아 주검을 수습해 갔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망자와 당시 동행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 제보된 희생자는 박병현(당시 24·시계 영업사원)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5·18묘지를 찾은 박씨의 동생 재영(38·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씨는 “아버지(지난 2월 사망)와 가족들이 1980년 5월23일 저수지 위쪽 노대마을 인근 야산에서 형의 주검을 찾아냈다”며 “뒤늦게나마 진압군이 참회를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1987년 부검 결과 박씨 주검의 두 개골에서 총상이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박씨는 뒤늦게 5·18관련자로 인정받아 5·18묘지에 안장됐다.

광주/정대하 안수찬기자

daeha@hani.co.kr

“80년 민간인 사살 암매장”

당시 공수부대원 4명, 진상규명위에 양심고백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주둔한 공수부대원 출신 4명으로부터 민간인을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는 양심고백을 받아냈다고 18일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4월 초 제보를 받고 기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수부대원으로부터 그 같은 사실을 시인 받고 또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가담한 공수부대 출신 중 한 명이 18일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상경했으나 개인의 신변 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일단 취소했다”라며 “한 달간에 걸쳐 기초조사를 해본 결과 공수부대에 의한 민간인 사살 및 암매장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80년 5월 22일 오후 2시 무렵 외곽으로의 시위 확산 차단 임무를 맡은 7공수여단 소속 부대원이 광주시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부근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노부부와 청년 2명을 검문하던 중 이 중 청년 2명이 달아나자 일제히 사격을 가해, 한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도주했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매복 중이던 부대

원 11명이 200m쯤 떨어진 지점에서 민간인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며 “당시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으로 ‘55년생 고흥 출신’임이 밝혀졌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에 주둔한 진압군 중 특히 7공수여단을 둘러싸고 암매장설이 많이 나돌았으나, 88년 광주청문회 당시 부대 대대장 K 중령은 “암매장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했으며 지난 96년 검찰의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崔普植기자 congchi@chosun.com

“5·18때 민간인 사살 암매장” 진압 공수부대원 양심고백

4명에 총격 1명 숨져... 의문사위에 제보

당시 지휘관의 청문회진술 뒤집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됐던 한 공수부대원이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한명을 암매장했다고 증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진압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해 암매장했다는 주장은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군측의 강한 부인으로 의혹으로만 머물러 왔었다.

이 전직 부대원의 고백은 특히 그가 소속된 부대의 대대장이었던 K중령이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총살된 시민의 암매장은 없었다”고 한 진술을 뒤집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이날 “당시 군인이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진압에 투입된 7공수특전단 소속 A씨(44)가 관련 사실 일체를 양심 고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씨의 고백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오는 26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80년 5월 21일 부대원 10명과 함께 광주시 남구 남저수지 부근에서 매복 중 시를 빠져나가는 비무장 민간인 네명에게 총격을 가해 한명을 사살한 뒤 근처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총격을 당한 시민은 노

인부부와 20대 남자 두명 등 모두 네명으로 이들은 고흥에 감매려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숨진 20대 남자는 55년생으로 이마에 관통상을 입고 현장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세명은 풀려났다”고 뚜렷이 기억했다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위원회 김학철(45)특별조사과장은 “당시 사건은 근처 밭에서 일하던 주민에게 목격됐으며 A씨와 함께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부대원 4명도 그의 고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부대원들은 사건 직후 숨진 청년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사항과 사살 경위 등을 무전으로 중대장에게 보고했으나 당시 작전 일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청년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5·18 민간인 사살 암매장”

당시 진압참여 공수부대원 첫 고백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한 공수부대원이 매복중 민간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들이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제보가 최근 들어와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을 쏜 공수부대원(44·현재 회사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 현장에서 함께 총을 쏘던 다른 공수부대원 3명도 이를 시인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의문사규명위는 “당시 이들 공수부대원들은 현장을 지나가던 민간인

4명(노부부와 남자 2명)을 폭도로 오인했고, 보고를 받은 중대장의 사살 명령에 따라 도망가는 이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가했으며 이중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아 숨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뒤 83건의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를 조사중인 의문사위원회에 가해자가 직접 ‘양심적 제보’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규명위에 따르면 80년 5월 22일경 광주 남구 주남마을 근처 남저수지 부근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매복중이던 당시 7공수특전여단 00대대 소속 부대원 4명이 지나가던 민간인 4명

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

이 총격으로 55년생으로 알려진 남자 1명이 숨졌으며 공수부대원들은 곧바로 현장 주변에 이 남자를 암매장했다는 것이다.

규명위 “조사여부 26일 결정”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26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직권조사가 결정되면 죽은 남자의 신원과 공수부대원들의 발포과정, 상급자의 개입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심고백한 공수부대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8년 국회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당시 진압군 부대 지휘관들은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동아희평

손문상

smoons@donga.com

한국만평

baekk@hk.co.kr

배계규



“상급부대서 사살-암매장 명령”

양심고백 5·18공수부대원 지휘계통 첫진술 파문예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양승규)는 19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한 시민을 암매장했다고 양심고백을 한 전 7공수특전대 부대원 A씨의 고백을 통해 상급 부대에 '정식 보고계통'을 밟은 뒤 총격과 암매장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발포명령의 지휘계통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위원회가 전한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광주시 남구 노대 남저수지 인근을 이동중이던 A씨등 10여명의 부대원은 시민 4명이 자신들을 보고 놀라 달아나는 사실을 상급부대에 보고하자 총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A씨는 암매장과 관련해서도

“총격으로 한 명이 숨지자 신원을 확인한 뒤 곧바로 상황보고를 통해 상급부대로부터 현장에 암매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 특별조사과 관계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모든 의문사 사건들의 관계자들이 이같은 양심고백에 나서기를 바라며 실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kr

“민간인 사살 암매장했다”

5·18당시 진압군 양심고백

5·18 당시 진압군으로 매복하다가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40대 남자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양심고백을 했다.

의문사규명위는 광주항쟁 때 군인이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제보가 최근 들어와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건 발생 21년만에 양심고백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문사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80년 5월 22일께 당시 주남마을 근처 광주시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부근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매복하던 모공수여단 부대원 5명이 지나가던 민간인 4명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의문사규명위는 이 과정에서 55년생 남자로 알려진 1명이 숨졌고 부대원들이 이 시신을 산에 끌고가 암매장을 했으며 근처에서 발을 매던 아주머니와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의문사규명위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양심선언을 한 남자의 동료 부대원들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광]

암매장 규명·발굴 정부 나서야

양심선언 계기 무명용사묘·행불자 전면 재조사도

80년 5·18 당시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한 공수부대원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뒤 사체를 암매장했다고 양심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유가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암매장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발굴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5·18 구묘지에 있는 11기의 무명용사묘에 대한 유골 감식과 80년 5·18 이후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65명의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8일 5·18당시 공수부대원으로서 진압군에 참여했던 40대 남자가 “80년 5월 22일께 당시 주남마을(현 노대마을) 근처에서 노부부와 청년 등 민간인 5명에게 총격을 가해 이중 ‘55년생 남자(당시 25세)’ 한명이 숨졌고 시체를 인근 산에 암매장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55년생 남자는 80년 5월 23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남구 효덕동 노대마을 남저수지 인근을 지나다 공수부대원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숨진 박병현(당시 25세·K손목시계 호남총판 영업사원)씨로 확인됐다.



◇지난 80년 5월 23일 계엄군의 양민학살을 목격한 윤금순(여·63)씨가 당시 현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상황설명을 하고 있다.

／羅明柱기자 m.ja@kwangju.co.kr

그동안 군당국은 80년 5·18당시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암매장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이번 진상규명위의 발표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암매장 의혹을 풀기 위한 정부, 국방부, 광주시, 5월단체가 공동참여하는 정부차원의 조사단 구성 및 전면적인 조사·발굴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黃台鐘기자 hwangtae@kwangju.co.kr



농사 도우러가다 총격 세례 노대마을 인근 야산 암매장

양심선언으로 확인 故박병현씨의 죽음



80년 5·18 당시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한 공수부대원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진 고(故) 박병현(당시 25·사진)씨의 죽음은 5·18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숨져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박씨의 큰형 박종수(56·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씨 등에 따르면 병현씨는 지난 80년 5월 23일 K손목시계회사 호남총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5·18로 인해 영업을 불가능하자 당시 보성군 노동면 거성리에 살던 아버지

박월례(81·지난 2월 사망)씨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고향전주 김영길(45)씨와 함께 보성에 내려가다 변을 당했다.

박씨는 사고 당일날 친구 김씨와 함께 화순에서 버스를 타고 보성으로 내려가기 위해 광주 인성고를 지나 화순으로 걸어가는 도중, 이날 오후 6시께 광주시 남구 효덕동 노대마을 남저수지 앞에서 이곳에 매복중이던 공수부대원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윤금순(여·63)씨는 “숨진 박씨가 군

인들의 지시에 따라 손을 들고 서 있는데 군인들이 박씨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씨의 사체는 당시 공수부대원들이 노대마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고, 이후 자신 조상의 묘지 근처에 매장된 사실을 안 주민에 의해 또 다시 다른 장소에 암매장됐다 숨진지 20여일만에 가족들에 의해 수습됐다.

박씨의 가족들은 1차 검안결과 뚜렷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자 박씨의 사체를 고향으로 옮겼으나 이후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사체를 발굴해 검안기로 하고 조선대 병원 법의학대에 검안을 맡겨 박씨가 총상에 의해 숨진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박씨의 사체는 고향에 묻혀있다 지난 83년 아버지가 “망월동에 가야 역사에 영원히 남는다”며 이장을 결정, 5·18 묘지로 옮겨졌다.

黃台鐘기자 hwangtae@kwangju.co.kr

드러난 '암매장'...철저 규명을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진다. 아무리 실제적 진실을 부당권력이 감추려 해도 그 수명이 오래갈 리 없다. 민주와 인권을 외쳤던 80년 5월의 광주는 이래서 많은 곡해와 수난을 겪기도했다. 아직도 일부 편협세력들은 그 음습한 이중적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전국화의 길에 접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음해세력의 한결같은 억지논리다. 이러니 희생자의 원혼이 구천을 떠돌며 편안한 안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동안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 등 많은 진상규명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미흡하기만 하다. 그러던중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매복하다가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40대 남자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양심 고백을 했다.

또 당시 진압군의 민간인 사살을 목격한 주민들이 그때의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다. 21년간 루머로만 여겨왔던 행불자들의 암매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회 5·18 청문회때 80년 당시 진압군 대대장 등 지휘관들의 '민간인 암매장은 있지않았다'는 증언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향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당시 광주시민들은 진압군의 잔인성을 보고 치를 떨었다. 능히 암매장을 하고도 남을 만큼 그들은 살인 기술자 마냥 행세했기 때문이었다.

40대 남자의 양심고백은 함께 근무했던

공수부대원 5명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훨씬 설득력을 지녔다. 이제 는 광주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즉각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암매장지를 찾아 발굴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진상을 제대로 밝혀 비운에 숨진 넋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이젠 엄연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민주국가다. 명명백백하게 암매장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모든 지원과 후속조치에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

스페인 내란때 프랑코는 우호세력인 나치에 구원을 요청. 게르니카 주민 1천여 명을 기총소사로 살해했다. 스페인의 양심세력은 물론 전세계가 프랑코 비난에 열을 올렸다. 피카소는 '게르니카 학살'을 그려 고국 우익정권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렸다. 프랑코는 75년 죽음을 앞두고 군부세력을 외면하고 부르봉 왕가의 후예 카를로스 6세를 후계자로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만행과 스페인의 민주화에 조종(弔鐘)을 울린 죄과를 회개해 민주성향과 정통성이 있는 왕가의 인물인 카를로스 6세를 국왕의 자리에 올려놨던 것이다. 이로인해 프랑코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던 인물이란 평을 받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5월 광주'를 짓밟았던 가해자들을 보자. 회개는 커녕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진정한 광주의 봄은 바로 이들의 석고대죄와 '암매장'의 진실이 밝혀질때만이 가능하다.

“민간인 사살 암매장했다”

5·18 진압군 21년만에 양심고백

주남마을 매복중 4명에 총격 1명 사망
당시 지휘관들 '국회 위증' 파문 예고
철저한 재조사... 진상 반드시 밝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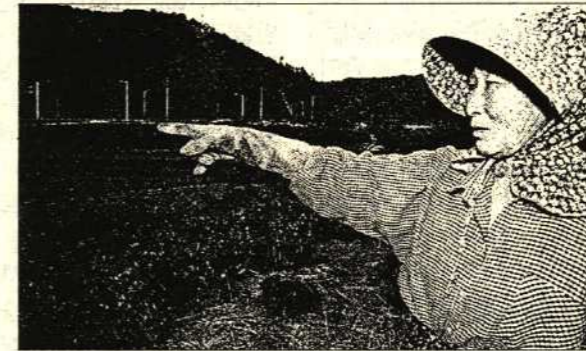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매복하다가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40대 남자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양심 고백을 했다.

또 당시 진압군의 민간인 사살을 목격한 주민들이 당시의 실상을 생생히 증언해 주었다.

이에따라 국회 5·18청문회때 80년 당시 진압군 대대장 등 지휘관들의 '민간인 암매장은 없었다'는 증언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상돼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의문사규명위는 광주항쟁 21년 만에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제보가 최근 들어와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44)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건발생 21년만에 양심고백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문사규명위에 따르면 80년 5월 22일경 당시 주남마을(현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부근)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매복하던 모 공수여단 부대원 5명이 마침 지나가던 노부부의 청년 등 민간인 4명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의문사규명위는 이 과정에서 '55년생 남자(당시 25세·시계회사 외관원 추정)로 알려진 1명이 이미에 관통상을 입어 숨졌고 부대원들이

시신을 산에 끌고가 암매장을 했으며 근처에서 밭을 매던 이 마을 아주머니(62)와 딸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당시 목격한 윤금순(63·남구 노대

동)씨는 "80년 5월 22일경 철곡재와 문적산 일대를 수색하던 공수부대원들이 보상으로 향하던 청년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며 "한 청년은 도망가고 시계회사 외관원으로 보이는 20대 중반의 청년은 목 부위에 총 한방을 맞고 쓰러졌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수입 후 도망간 청년과 한쪽다리를 잘던 죽은 청년의 형 등 가족들이 양동에서 장의사를 데리고 와서 시신을 수습해 갔다"고 회고했다.

한편 88년 광주 청문회때 진압군 부대 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암매장이 없었다고 진술해 거짓증언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예상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부대원들은 숨진 청년의 주민등록과 사살 경위 등을 무전으로 대대에 보고했으나 당시 작전일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규명위는 이 사건을 직권조사 사건으로 접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전반적 재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최민석기

“저기에요”

80년 5월 공수부대원의 민간인 사살을 목격한 윤금순씨가 현장을 가리키며 그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사실로 드러난 5·18 암매장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진압군으로 매복하다 민간인을 사살한 후 암매장했다는 40대 남자가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양심고백을 했다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80년 5월 22일께 당시 주남마을 근처 광주시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부근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매복 중이던 모 공수여단 부대원 5명이 지나가던 민간인 4명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55년생 남자 1명이 숨졌고 부대원들이 이 시신을 산으로 끌고가 암매장했으며 근처에서 밥을 매던 아주머니와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전했다. 또한 목격자 진술과 함께 양심선언을 한 남자의 동료부대원들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21년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행불자들의 암매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진상규명위의 발표를 광주·전남시·도민과 함께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행방불명자'란 이름으로 구천을 헤매고 있는 64위 영령들의 암매장 의혹을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함께

근무중이었던 공수부대원 5명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광주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암매장지를 찾아 발굴 작업에 들어가는 등 제반 조치에 나서기 바란다. 물론 현재 광주시가 진행중인 행방불명자들의 암매장 제보지 47개소와 광주시립묘지 제3묘원(구 망월묘역)에 묻혀있는 '무명열사'라 불리우는 무연고 분묘 11기의 발굴작업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즉시 확인 및 발굴작업에 들어가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생사여부조차 모른 채 21년이란 긴 세월을 가슴조이며 살고있는 행불자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금방이라도 대문을 열고 어머니를 부르며 들어올 것만 같아 지금도 아랫목에 밥을 묻어두고 아들을 기다린다는 '5월 어머니'의 외침을 생각해서라도 즉시 제반 조치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아울러 당시 관련자들의 더 많은 양심고백이 있기를 기대한다. 21년이 지난 만큼 이제 는 털어놓을 때도 됐지 않은가.

“암매장 전면조사 피맺힌 恨 풀어라”

공수대원 고백 '만행' 사실로 5·18 행불자가족 21년째 피울음 제보만 47곳 국가차원 발굴을

5·18 당시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한 공수부대원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고 양심고백함에 따라 그동안 부분적으로 제기된 암매장 의혹에 대한 국가기관의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또 5·18묘지에 있는 무명열사 묘에 대한 유골감식과 행방불명자의 생사여부도 조속히 파악해 21년간 응어리진 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5·18학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게 행불자 가족과 5월 단체, 광주시민들의 여론이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5·18 당시 진압군으로 매복하다 민간인을 사살, 암매장했다는 40대 남자가 사건발생 21년 만에 양심고백을 했다고 밝혀 그동안 암매장 사실을 전면부인해온 군

당국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암매장 사실을 전면부인해 왔으나 이 민간인의 경우 비무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암매장 제보지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 광주시, 5월 단체의 공동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5·18 관련 암매장 장소에 대한 제보는 47개소가 접수돼 있지만 21년째 공식적인 암매장 발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5·18 묘지에는 무명열사묘 11기가 이듬도 밝혀지지 않은 채 안치돼 있으며, 행불자도 218명이 신고돼 있지만 이 가운데 64명만이 공식인정됐을 뿐이다.

행불자 가족들은 21년이 지난 지

금까지 5·18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신없는 비석 앞에서 구천을 땀줄고 있을 자신들의 피맺힌 한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80년 5월 21일 행방불명된 고재덕(당시 14세)군의 어머니 손금순

“민간인 사살·암매장했다”

당시 공수대원 양심고백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진압군으로 매복하다가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40대 남자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양심고백을 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당사자(44)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건발생 21년 만에 양심고백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80년 5월 22일께 당시 주남마을 근처 현재 광주시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부근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매복하던 모 공수여단 부대원 5명이 마침 지나가던 노부부의 청년동 민간

(69)씨는 “시신이라도 찾아 응어리진 한을 풀어줬으면 더이상 바랄 게 없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암매장 의혹장소를 찾아 유골만이라도 수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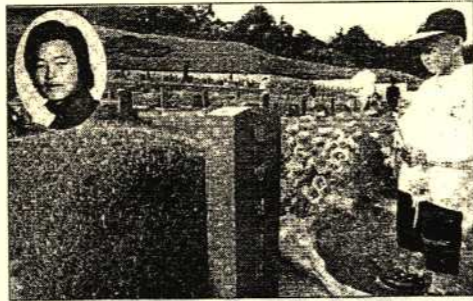
암매장 발굴과 관련, 5·18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오는 6월말 암매장 발굴담을 구성해 장마가 끝나는 9월초부터 국비 5억원을 들여 암매장 발굴과 무명열사묘에 대한 유골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행불자 가족이 유전자 감식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과 일반 시민들의 암매장 장소 등에 대한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연국 기자 cyokim@chonnamilbo.co.kr

인 4명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과정에서 '55년생 남자(당시 25세·광주서시 계방운영)로 알려진 1명이 이마에 관통상을 입어 숨졌고 부대원들이 시신을 산에 끌고가 암매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88년 5·18청문회 당시 진압군 부대 대장등 지휘관들은 암매장이 없었다고 진술해 거짓증언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예상된다. 당시 부대원들은 숨진 청년의 주민등록과 사살 경위등을 무전으로 대대에 보고했으나 당시 작전 일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나석주 기자



80년 5월 공수부대에 의해 사살돼 5·18묘지에 안치된 박병현(당시 25세)씨의 묘와 박씨의 생전 모습(사진 원내) / 최동환 기자 cdhchoi@chonnamilbo.co.kr

‘양심고백’ 암매장 피살자는 박병현씨

96년 본보 특종보도
날짜만 차이 모두 같아
현재 5·18묘지 안장

80년 5월 민간인을 사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공수부대의 첫 양심고백은 전남일보가 지난 96년(1월8일자 23면) 특종보도한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진압군에 의해 암매장이 자행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수부대가 사살 암매장한 피해자는 박병현(당시 25세·보성군 노동면 거석리)씨로 현재 5·18묘지(묘지번호2-2)에 안장돼 있으며, 유가족으로는 어머니 박월래(해남가주)씨와 형이 있다. 또 숨진 박씨와 함께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청년은 박씨의 친구인 김영길(42·서울거주)씨.

박씨의 사랑과 암매장 사실은 80년 당시 사살현장을 목격했던 윤금자(가명·62·광주시 남구 효령동 노대마을)씨가 지난 96년 본보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자의 확인이나 양심선언이 없어 목격담으로 보도됐었다. 당시 윤씨의 증언내용과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씨는 80년 5월 23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남구 효령동 노대마을 저수지 야산에서 딸 미숙(당시 14세)씨와 함께 쭉을 매다 공수부대요원이 손 총에 맞아 1명이 숨진 것을 목격했

었다. 윤씨는 “공수부대요원들이 산길을 가던 4명에게 ‘손들어’라고 외쳤지만 젊은 사람이 도망가자 그대로 사살했다”고 증언했다.

공수부대원들은 이어 산 아래 노대마을로 내려와 주민에게 산과 소주 1병을 얻어 윤씨의 시아버지 묘소 위편에 이



노대마을 암매장사건을 보도한 본보 96년 1월8일자.

사체를 묻고 돌맹이로 덮은 뒤 사라졌다.

당시 노대마을 인근은 계엄군이 외곽으로 나가는 모든 도로를 봉쇄하자, 산길로 회순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시민들이 많이 몰리던 곳이었다. 숨진 박씨는 형 중수씨에 의해 숨진 지 3일만에 시신이 수습된 뒤 5·18묘지묘역에 안장됐다.

한편 양심고백을 했던 공수요원은 당시 시 외곽지역에 배치됐던 11공수나 7공수부대로 추정되고 민간인 사살일을 22일로 기억하고 있어 본보에 제보한 윤씨의 주장과 하루 차이가 나고 있다. 날짜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본보 기사내용과 일치했다. / 박중재 기자 cijpark@chonnamilbo.co.kr

암매장 전면 조사해야

아무리 가리고 없애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1980년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40대 남자가 최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고 양심고백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근무했던 공수부대원 다섯명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로써 그동안 목격담으로만 떠돌던 민간인 사살, 암매장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88년 국회 광주청문회때 진압군 부대 지휘관들은 암매장 사실을 전면부인했으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증언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암매장이 어디 이곳뿐이겠는가. 광주시에는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광주교도소 인근 야산, 주남마을 주변, 망월동 분도마을, 담양 남면 골짜기 부근, 경기도 용인, 성남비행장 등 47개소가 암매장 추정지로 신고돼 있다. 진압군으로 참가한 사람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암매장지가 밝혀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암매장 추정지 발굴작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광주시도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암매장 발굴작업과 무연고 묘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선다고 했지만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따라 5·18유족회 등이 자체적으로 발굴작업에 나섰으나 지형변화, 장비부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부영산, 황룡강 등에서 유골이 발굴되기도 했지만 5월단체와 국내 법의학자의 이견으로 상호 불신의 벽을 높이 쌓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정부의 공식기구를 통해 5·18 당시 암매장 사실이 드러난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우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양심고백한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여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밝혀진 사실에 따라 암매장 추정지 발굴작업을 추진하고, 또 5·18 묘지에 있는 무명열사묘에 대한 유골감식과 행방불명자의 생사여부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 유골만이 라도 수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5·18 행불자 가족들의 한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 나서되 국방부, 광주시, 5월단체들이 국내 법의학자들과 공동으로 암매장 제보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법의학계는 충분한 경험을 쌓았고 국민의 정부 등장이후 유무형의 제약조건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Former Soldiers Confess Killing Civilians in Kwangju

Former soldiers admitted killing and burying innocent civilians in the 1980 military crackdown on a pro-democracy uprising,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said yesterday.

The commission said testimonies confirming the murders and cover-ups were obtained during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and former soldiers dispatched to Kwangju in May 1980.

However, the commission did not identify the five soldiers who made the confession.

The incident occurred on May 22, 1980 near a water reservoir in Junam Village in southern Kwangju, when five members of an airborne unit shot four civilian pedestrians.

One of them, a man in his mid-twenties, was killed instantly, but has never been identified, the commission said.

The testimonies contradict testimony obtained in 1988 from generals who claimed there

were no clandestine killings and burials of innocent victims by troops.

The Kwangju uprising in May 1980 occurred in protest of the coup that later brought Gen. Chun Doo-hwan to power.

Chun proclaimed martial law over the entire country to ruthlessly suppress democratization movements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in October 1979.

Chun at the time claimed that the uprising was a "Communist and North Korean conspiracy" to

gain control of the nation.

His military government sentenced Kim Dae-jung, one of the two main opposition leaders and a native of South Cholla Province, to death on charges of leading the rebellion and thus committing the crime of high treason and inciting a civil war.

Kim's execution was never carried out, and he was later released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pressure. He was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in 1997 after nearly three decades as an opposition leader.

Former soldiers confess to killing of innocent civilians in Kwangju

Former soldiers admitted to killing and burying innocent civilians in the 1980 Kwangju uprising,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said yesterday.

The commission said testimonies confirming the murders and cover-ups were obtained during interviews with former soldiers and local residents.

The incident occurred May 22, 1980, near a water reservoir in Junam Village, now Nodaedong, Kwangju, when five members of a nearby airborne unit shot four civilian pedestrians.

One of them, a man in his mid-twenties, was killed but never identified, the commission said.

The testimonies contradict the 1988 testimony of generals who claimed there were no clandestine killings of innocent victims by troops.

The Kwangju uprising in May 1980 was in protest over the coup by General Chun Doo-hwan. Chun proclaimed martial law over the entire country to ruthlessly repress democratization movements.

Chun claimed at the time that the uprising was a "Communist and North Korean conspiracy" to gain control of the nation.

His military government sentenced Kim Dae-jung, one of the two main opposition leaders and a native of South Cholla Province, to death on charges of directing the insurgents, committing crimes of high treason and civil war.

Kim was later released due to international pressure. (Yonhap)

'5·18 암매장' 희생자 신원확인

55년생 보성출신 박병현씨
사망기록·친구증언등 일치

속보=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공수부대원의 양심선언을 접수, 진압군에 피살, 암매장된 것으로 발표한 55년생 남자(본보 19일자 27면 보도)는

전남 보성 출신 박병현(朴炳炫·당시 25세)씨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박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김모(47)씨는 20일 "양심선언 내용으로 보아 친구 박병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80년 5월23일께 병현이와 함께 모내기를 위해 고향인 보성으로 내려가다 광주 남구 노대동 인성고 뒤편 저수지 부근에서

공수부대원들을 만났다"며 "보리밭에 숨어 있는데 병현이가 달아난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6월초 병현이 아버지와 경찰들과 함께 현장으로 갔는데 시신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이장돼 있었고 시계 등 소지품은 모두 없어졌다"며 "당시 주민들로부터 병현이가 저수지에서 100~200m 떨어진 고추 밭에 엎드려 있었고 군인들이 '손들고 나와라. 셋을 세겠다'고 해 일어나자 총을 쏘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5·18암매장' 희생자 신원확인 "보성출신 박병현씨" 친구 증언

80년 5·18 당시 진압군에 사살돼 암매장된 사람은 전남 보성 출신 박병현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살해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김영길씨(47·서울 거주)는 20일 "양심고백 내용이 당시 고향으로 함께 내려가다 변을 당한 친구 박병현(당시 25)이를 정확히 지칭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80년 5월 23일 광주에 사는 고향선배 집에서 병현이와 함께 식사한 뒤 모내기를 위해 고향 전남 보성군 노동면 거석리로 내려가다 인성고 뒤편 한 저수지 부근에서 공수부대원들을 만났다"며 "나는 저수지 배수로를 따라 도망가 보리밭에 숨어 있었는데 친구가 달아난 방향에서 곧 총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사실된 박씨는 뒤늦게 5·18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5·18묘역에 안치돼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kdaily.com

"내 친구가 공수부대원에 피살"

'5·18 양심고백' 희생자
보성출신 박병현씨로 확인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에 의해 사살돼 암매장된 사람은 전남 보성군 출신의 20대 남자로 밝혀졌다. 당시 살해현장을 목격했다는 김영길씨(47·서울 거주)는 20일 "공수부대원이 사살 후 암매장한 사람은 당시 고향으로 함께 내려가다 변을 당한 친구 박병현(당시 25세)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80년 5월23일 광주에 사는 고향선배 집에서 병현이와 함께 식사한 뒤 모내기를 위해 고향인 보성군 노동면으로 내려가다 광

주 북구 송하동 인성고 뒤편 저수지 부근에서 공수부대원들을 만났다"며 "군인들을 보자마자 나는 저수지 배수로를 따라 도망갔는데 친구가 달아난 방향에서 곧 총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해 6월초 병현이 아버지 및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갔더니 친구 시신은 마을 주민들이 이장해 놓았고 시계 등 소지품은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며 "당시 주민들은 병현이가 저수지에서 100여m 떨어진 고추밭에 엎드려 있었는데 군인들이 '손들고 나와라. 셋을 세겠다'고 해 친구가 일어나자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5·18 양심고백 피살자 신원 밝혀져

전남보성 출신 박병현씨
현장 함께 있던 친구 증언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서 5·18 때 민간인 사살 암매장 사실을 고백한 A씨 등 당시 공수부대원들에게 피살된 민간인은 전남 보성 출신 박병현(당시 25세·사진)씨로 밝혀졌다.



당시 차씨 피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모(47·서울 거주)씨는 20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수부대원들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고향 친구 박병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차씨와 함께 고향으로 모내기를 하러 가던 중 광주시 남구 효덕동 노대마을 저수지 부근에서 매복 중인 공수부대원들을 만났다"며 "나는 저수지 배수로를 따라 도망갔으나 차씨는 인근 고추밭에 숨어 있다가 총에 맞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부근에서 밭일을 하다 현장을 목격한尹모(63·여)씨도 이날 "숨진 청년을 공수부대원들이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고 20여일 만에 보성에 사는 가족들이 사신을 수습했다"고 말했다.

5·18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이와 관련, "공수부대원의 양심 고백으로 그동안 '암매장한 사실이 없다'는 군당국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암매장 등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황인성(黃寅成)사무국장은 "암매장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차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면서 "그럴 경우 발표 명령권자가 누구인지까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구두훈 기자

<dhkoo@joongang.co.kr>

'5·18암매장' 희생자 신원 확인

전남 보성출신 박병현씨

80년 5·18 당시 진압군에 사살된 뒤 암매장됐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민간인은 전남 보성 출신 박병현(사진)씨로 보인다고 박씨의 주변 사람들이 20일 말했다.

박씨의 큰 형 박종수(56·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씨는 "지난 80년 5월 23일 손목시계회사 호남총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박병현(당시 25세)씨가 영업을 할 수 없자 아버지의 농사를 돕기 위해 고향친구 김영길(47·서울 거주)씨와 함께 보



성으로 내려가다 참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고향친구 김씨도 "그날 오후 6시쯤 병현이와 함께 보성으로 내려가다가 인성고 뒤편(광주시 효덕동 노대마을) 저수지 부근에서 공수부대원을 만나자, 같이 있던 7-8명이 달아났고, 나도 보리밭에 숨어

있었다"며 "병현이가 달아난 방향에서 곧 총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光州=權景鎭기자 gkwon@chosun.com

암매장 사실 밝힌 양심고백

5·18 민중항쟁 당시 진압군이었던 한 부대원이 민간인을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는 양심고백을 했다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했다. 위원회는 암매장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벌이던 중, 당시 특전사 7공수특전여단 33대대 소속 부대원이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현장에서 함께 총을 쏘던 다른 공수부대원 3명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남구 노대동 남저수지 부근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매복했다가, 중대장의 발포 명령으로 민간인 일행 4명에게 조준사격을 가해 그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이런 발표는 "공수부대원에 의한 비무장 민간인 사살 및 암매장은 없었다"는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지휘관들의 증언 내용과 배치된다. 민간인 사살 암매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술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가해자측에서 이를 부인해왔다. 이번에 가해자 중 한 명이 양심고백을 한 것은 '진실은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을 확인해 준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망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공수부대원들의 발포 과정, 상급자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특히 암매장 사실이 은폐되는 과정에서 상부의 조직적인 지시나 공작이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조사 결과 청문회 당시 지휘관들이 위증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죄를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곳에서 민간인 사살 암매장 의혹이 제기됐지만, 어느 것도 실제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 이런 일은 현지 민간단체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어언 21돌이 됐다. 그동안 오월 민중항쟁의 의의가 널리 알려져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되고 기념식도 여는 등 이들의 명예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월이 흘러도 피해자들의 상처는 험사리 아물지 않는다. 우리가 민주·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의로운 항쟁을 인정한다면, 실질적 명예회복조치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5·18 관련자를 포함한 모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여전히 심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식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말해 준다. 여야는 형평성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 역사적 의무를 기리기 바란다.

'5·18암매장사건' 조사여부

의문사규명추 내달2일 결정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에 의해 살해된 뒤 암매장된 것으로 밝혀진 박병현씨(당시 25세) 피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여부를 다음달 2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박씨 피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박씨의 직접사인이 밝혀지고 명예회복도 된 만큼 위원회가 굳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이 제기돼 최종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박씨 사건을 직권조사할 경우 이에 연루된 공수부대 지휘계통의 발포명령과 암매장 지시 등 조사범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5·18 민간인 암매장 사건' 직권조사 다음달 2일 결정

발포명령자 등 조사범위 관심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진압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고 암매장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병현(당시 25세)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가 오는 6월2일 결정된다. (노동일보 5월19일자 1면 참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박씨 피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개시 여부를 지난 26일께 결정하려고 했지만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다음달 2일 위원 9명이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할 경우, 암매장 지시여부와 함께 발포명령을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등 조사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직권조사 여부는 내부의 이견이 있는 관계로 '의문사'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 위원들의 합의하에 결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직권조사를 결정해도 진상규명위의 조사범위는 박씨 사건 자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상규명위는 5·18 당시 진압군의 일원이던 제보자가 민간인 박씨를 사살, 암매장했다는 양심고백을 지난 18일 공개한 바 있다.

/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5·18 진압군 사살 암매장 박병현씨

“직권조사 반드시 실시돼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5·18당시 진압군에 의해 살해 암매장된 박병현(당시 25세)씨 사건의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을 연기한 가운데 5·18단체와 시민들은 “5·18진상규명의 최대 핵심사항중 하나인 공수부대 발표명령의 지휘계통을 가릴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반드시 직권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2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살해 암매장했다’는 옛 공수부대원의 양심고백으로 드러난 박병현씨 피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논란이 있어 최종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

5월단체, “발포명령자 밝힐 기회” 정치적 유아무야 되지 않을까 우려

이에 대해 5·18단체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자칫 5·18당시 진압군의 발표명령책임자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정치적으로 유아무야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5·18기념재단 정용화 사무처장은 “박병현씨 사살 암매장사건에 대해 공수부대원들이 양심고백을 한 만큼 5·18 진상규명의 핵심사항인 발표명령의 지휘계통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인데도 진상규명위원회가 직권

조사여부를 미룬 것은 정치적인 눈치를 보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른시일 내에 반드시 직권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수만 5·18유족회장은 “박씨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누구의 명령을 받고 공수부대원들이 민간인을 사살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직권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발표명령자의 지휘계통이 밝혀질 수 있는데도 결정을 미루는 것

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씨 피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지으려 했으나 ‘가해자의 양심선언으로 직접사인이 밝혀지고 민주화운동 보상절차에 따라 명예회복도 다 된 마당에 위원회가 굳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이 제기돼 다음주 회의에서 최종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박씨 사건을 직권조사할 경우 박씨의 죽음에 당시 공수부대 지휘계통의 발표명령에 따라 이뤄졌고 암매장까지 지시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 지가 주목되고 있다. /유지호기자

5·18 암매장 즉각 조사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5·18당시 진압군에 의해 사살된 후 암매장된 박병현씨(당시 25세)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여부 결정을 연기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가해자 양심선언으로 직접사인이 밝혀지고 민주화운동 보상절차에 따라 명예회복도 다 된 마당에 위원회가 굳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으로 직권조사 결정을 미룬 자체가 5·18 진상규명의 핵심인 발표명령의 지휘계통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외면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권조사를 즉각 결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발표명령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21년동안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가 없는 이 서글픈 역사의 진실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정밀조사는 즉각 실시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을 역사앞에 떳떳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는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방해를 비롯한 정치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사안

이 직권조사 결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하지는 것은 가해자들을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첫번째 이유이고, 미완의 과제인 진상규명이 두번째 이유이며, 지금도 구천을 떠도는 5·18 행불자들의 수많은 원혼과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함이 세번째 이유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직권조사는 즉각 결정되어야 하며 빠른 시일안에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더이상 미루면 그것은 역사앞에서도 ‘죄’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것이다. 반민족특위 등 정의와 진실을 시대적 여건상 외면한 잘못을 또 다시 되풀이 하려는가.

아울러 직권조사를 실시하되 암매장 제보지 47곳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다. 국방부, 광주시, 5월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선정한 국내의 법의학자들로 구성된 조사팀에 의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본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리티의 소리 minority

양심고백과 인간의 삶

양승규
의문사 진상규명위 위원장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양심을 갖추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심의 소리다. 양심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이 양심의 명령을 거슬러 거짓을 일삼고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양심고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고 참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인간성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朴正熙) 군사정권의 유신체제 이후 독압정치가 계속되면서 이른바 양심선언을 통해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며 인권의 존중을 촉구하고 참회하도록 유도한 분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분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민주화의 길을 걷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

“왜 쓸데없는 일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의 어두운 밤을 밝히려는 용기와 희생이 교차한다. 전두환(全斗煥) 군부세력의 야욕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의 항거를 무력으로 짓밟은 것은 전자기고, 이를 통해 인간의 양심과 정의를 일깨워준 것이 추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당시 발표 명령자의 책임소재도 밝히지 못한 채 그 희생자에 대한 보상으로 마무리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압군에 의해 일반 시민이 사살되고 암매장됐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우리 위원회에 5·18 당시 네명의 시민에게 총격을 가해 그 중 한 명이 죽어 암매장됐다는 제보가 들어 왔다. 특전대원 한 분이 양심고백을 하고 조사관의 조사로 그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5월 18일 나는 그 대원을 만나 그의 용기 있는 양심고백을 크게 평가하고 우리 사회에 등불을 밝힌 소중하고도 값진 일임을 들어 감사했다.

그는 당시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무고한 시민을 폭도로 간주, 사살해 암매장했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유족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자신도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몹시 괴로워했다

고 한다. 그러던 중 의문사 관련 당사자의 양심고백과 제보를 바라는 위원회의 홍보물을 보고 여러 날 고민하다가 마침내 기회가 생겨 양심고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실을 이웃과 동료들에게 얘기했다. “너 미쳤어?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는 편견을 듣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끝이 깊은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밝은 앞날을 위해서도 하루 속히 시정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고 나니 “아주 마음이 편하고 그 유족에게도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숙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이런 고백은 이 혼돈의 시기에도 양심의 등불은 결코 꺼질 수 없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참으로 값진 보배가 아닐 수 없다.

동료 편견·좌절감 딛고
특전대원 아름다운 고백

양심선언은 권력남용이나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회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를 폭로하는 것이고, 양심고백은 자신이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이를 알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를 참회하고 고백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양심선언이나 양심고백은 다 같이 행위자가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는 용기 있는 행위로서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다.

20여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특전대원의 양심고백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감춰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고뇌를 물어두기보다 이를 밝혀 마음의 평화를 얻고 화해하는 것이 참된 삶의 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면서 양심에 따라 언제나 새롭게 살려나가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잘못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인간다운 양심고백이 계속 이어져 의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희망찬 앞날이 밝아지기를 기대한다.

<의문사규명위 직권조사 놓고 혼선>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옛 공수부대원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난 박병현(당시25세)씨 피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6일 박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직접 사인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이 된 마당에 위원회가 굳이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일어 최종 결정을 1주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1주일 뒤인 지난 2일 박씨 사건을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언제 논의한다고 시한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아 논의 자체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중간 조사결과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위원회 내부의 이견때문에 제대로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가 박씨 사건을 직권조사할 경우 5.18 당시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된 공수부대 지휘계통의 발포명령과 암매장 지시여부 등도 조사범위에 해당될지 주목되고 있다.

sungjin@yna.co.kr

(끝)

박병현씨 직권조사
의문사규명위 혼선
상정도 않고 또 연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옛 공수
부대원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
난 박병현(당시 25세·고흥군
노동면 거성리)씨 피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둘러싸고 혼
선을 빚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6일
박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
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직접 사
인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이 된
마당에 위원회가 굳이 조사범
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일어 최종 결정을 1주
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1주일 뒤인
지난 2일 박씨 사건을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언제 논의한다고 시
한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아 논
의 자체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
고 있다.

박영두 사건 관련 보도

84년 청송교도소 의문사 박영두씨 “교도관 집단폭행에 숨졌다”

규명위 첫 타살 확인
조직적 은폐 추가 조사
관련자 전원 고발키로

지난 1984년 청송교도소에 복역중이던 박영두(당시 29살)씨 교도관들의 집단폭행 끝에 사망한 사실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진상규명위는 4일 “박씨가 의무대 이갑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구타당한 뒤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오는 23일께 위원회의와 7월 중순 대통령 보고를 거쳐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관련자들을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규명위가 의문사의 원인과 타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명위는 사건 발생 당시 박씨와 함께 복역하며 구타사건을 목격했던 동료 재소자와 당시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했던 교도관 등으로부터 사건 일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상 사건조사를 마쳤다. 규명위는 현재 당시 검사와 교도소장 등이 사건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를 밝히는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규명위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81년 10월1일 육군 제27사단 77연대 4대대에서 일어난 삼청교육대 집단난동 주동자로 지목돼 군사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후 84년 10월13일 의무대 이갑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해 지하실로 끌려가 못매를 맞고 기절한 상태에서 교도소 7사 지하정벌방에



“이제 시작” 9일 열리는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를 앞두고 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오종철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진상조사 진행과정 공개 및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경신 기자 raoul@hani.co.kr

포승줄로 온몸을 묶인 채 신음하다 이른날인 10월14일 새벽에 숨졌다. 특히 박씨가 간헐 징벌방 열방에 있던 동료 재소자가 박씨의 신음소리를 듣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도소측이 이를 묵살한 사실도 밝혀졌다. 박씨를 진압병 등으로 구타한 교도관들은 당시 청송교도소 이아무개 교위 등 7-8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86년 암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규명위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일부는 부분적으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 관계자는 “확실한 정황증거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사실규명과 혐의자 고발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당시 교도소측은 14일 아침 박씨의 사망사실을 확인했으나 직원회의에서 보안을 유지하라는 합구령을 내렸고, 박씨의 주검을 부검한 의사 김아무개씨(현재 경북 2병원 근무)도 타살 혐의 없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요지의 부검소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규명위 조사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당시 제대로 모르고 했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형 영일(56·경남 통영시 용남면)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

서 “교도소측의 전보를 받고 이른날 청송교도소로 갔지만, 이미 주검을 교도소 옆 산기슭에 매장한 뒤였다”며 “교도소 담당자가 위압적으로 ‘기상시간에 갑자기 쓰러졌다’고만 설명해 더 물어볼 엄두조차 못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난 99년 3월 박씨를 이장해 화장한 뒤 충무 앞바다에 뿌렸다. 형 영일씨는 “이장을 위해 처음으로 관을 열어보니 양팔만 걸친 채 옆으로 누어진 상태였다”며 “당시 제대로 부검도 하지 않고 급히 파묻은 흔적이 역력했다”고 주장했다.

안수진 기자 ahn@hani.co.kr

의문사진상규명 속도 붙었다

1차시한 7월고비 조사결과 잇단 발표...최종길교수 사건도 사실접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에 탄력이 붙고 있다. 청송교도소 박영두씨 타살 사건을 파헤친 데 이어 그동안 조사해온 사인들도 이른 시일 안에 매듭짓기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진상규명위가 박씨 타살 사건을 찾아낸 것은 군사정권 시절 평범한 한 시민이 공권력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과정을 온전히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씨가 군사정권의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것은 1980년 8월. 당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박씨는 고향인 충무 앞바다 비진도 해수욕장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다가 계엄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박씨는 계엄군이 당시 지방신문사 기자로 일하던 고향선배 김길수(사망)씨를 연행하려는 데 항의하다 강제연행됐다.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폭력전과가 있었던 박씨는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서 허룻밤을 보낸 뒤, 27사단 77연대의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박씨의 형 박영일씨는 "삼청교육대 시절 면회를 가니, 동생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빨리 꺼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이후 박씨는 삼청교육대의 집단난동에 휘말려 군사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84년 청송교도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84년 10월, 비인간적 처우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다 박씨는 교도관들의 폭력으로 숨졌다. 현재 규명위가 고발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은 당시 박씨를 구타했던 교도관들과 사건은 폐를 시도한 혐의가 짙은 교도소장을 비롯한 교도책임자, 그리고 박씨의 주검을 부검한 의사 등이다. 이들은 모두 사건이 발생한 지

첫 타살 확인 박영두씨 사연

80년 불심검문에 강제연행 폭력전과 이유 삼청교육대로 집단난동 휘말려 10년형 선고 청송교도소 처우 항의하다 교도관 폭행 '억울한 죽음'

10여년이 지나도록 진실에 대한 입을 다문 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 규명위 고위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의문사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 사건 외에도 1차 조사시한이 끝나는 7월을 고비로 굵직굵직한 몇가지 사건들의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73년 당시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 끌려가 변사체로 발견된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도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던중 변사체로 발견된 장준하 선생 사건도 타살에 의한 죽음으로 가닥을 잡고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문사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 출신 조사관과 정부파견 요원들이 밤낮으로 함께 뛰어다니며 진실규명에 애써 왔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많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명위의 노력이 제대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80여건이 넘는 의문사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조사시한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1차 기한 연장

도 3개월에 지나지 않아,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가 급선무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관련 혐의자가 드러나도 처벌할 길이 없어 규명위의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각 사회단체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진상규명위 사무실 앞에서 "진상규명의 성과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가 크다"며 조사과정의 공개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84년 청송교도소 의문사 "교도관 폭행에 사망"

진상위 첫 '他殺' 보고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梁承圭)는 1984년 청송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박영두(당시 29세)씨가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측은 4일 "지난 2월부터 사건을 조사한 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지난주 박씨의 사인을 타살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당시 교도소측에 의해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발표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박씨가 삼청교육대에 수용 중이던 81년 난동 주동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 84년 의무대로 옮겨 줄 것을 교도소측에 요구했으며, 이를 이

유로 교도관들에게 못매를 맞고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시 구타에 가담했던 교도관 세명은 재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관들은 당시 교도소에서 있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오는 23일께 사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타살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타살 의혹이 제기된 80여건의 자살·사고사의 사인을 뒤집는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위원회측은 당시 교도관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성시윤 기자 <copipi@joongang.co.kr>

'84년 청송교도소 심장마비사' 박영두씨

교도관 집단폭행 사망 확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타살 혐의 없이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박영두씨(당시 29세)가 교도관들의 집단폭행 끝에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해 10월 출범 이래 의문사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의문사의 원인이 타살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박씨와 함께 복역하며 구타사건을 목격했던 동료 재소자와 그때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했던 교도관 등

에게서 사건 일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상 사건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81년 10월 육군 모부대에서 일어난 삼청교육대 집단 난동의 주동자로 지목돼 군사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했었다.

/崔普植기자 congchi@chosun.com

삼청교육대 난동 주도 박영두씨 “교도관 집단폭행에 사망” 의문사규명위 사인 규명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의 8개월여에 걸친 조사 결과, 지난 84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숨진 박영두씨(29)의 사인이 교도관들의 집단 폭행으로 밝혀졌다.
의문사규명위 문덕형(文德炯) 제2상임위원은 4일 “박씨가 의무대 이갑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당한 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23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고발 및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81년 10월 삼청교육대 집단 난동 주동자로 지목돼 군사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 박영두씨 기자 youngtan@kdaily.com

“84년 청송교도소 복역 박영두씨 교도관에 집단폭행 당한후 사망” 의문사진상규명위 첫 확인

1984년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 의문사한 박영두씨(당시 29세)가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4일 “당시 삼청교육대 집단난동사건 주동자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씨가 의무대 이갑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정황상 박씨가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추정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이후 의문사 사건에 대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박씨와 함께 구타당한 다른 재소자로부터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박씨를 구타한 것으로 알려진 교도관들과 당시 교도소장, 조사검사(현재 변호사 개업) 등도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적용될 죄명과 이에 따른 공소시효 등을 판단해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박씨는 81년 10월 육군 모사단 4대대에서 일어난 삼청교육대 집단난동 주동자로 지목돼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84년 10월 13일 의무대 이갑 등을 요구하다 지하로 끌려가 교도관 3명에게 못매를 맞았다는 것. 박씨는 이후 교도소 징벌방에 있다가 이튿날인 14일 새벽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박씨의 주검을 부검한 의사는 박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요지의 부검소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하나씩 밝혀지는 의문사 진상

5공 시대인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의문사한 박영두씨(당시 28살)가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박씨가 숨지기 전날인 그 해 10월12일 ‘의무과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 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진단했던 담당 의사로부터도 부분적 과오를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실무팀이 마련한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강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박씨의 의문사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타살이라는 심증’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장준하씨 사건 등 유사한 의문사를 규명하는데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생존해 있을 목격자 등,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적인 증언을 촉구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억울하게 희생된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만이 아니다. 이를 규명하지 않고는 사회정의의 말 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의혹만 남긴채 덮여져 왔다. 그 결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판을 치고 청소년들에게는 ‘책갈피 속의 정의’와 현실과는 다른 것이라는 이중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그동안 조사위원 및 실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사건이 10여년 이상 지난데다 사건의 특성상 가담자나 목격자의 결정적 제보가 없으면 단서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란에서 우리가 거듭 지적 했듯이 조사기간 6개월을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한 현행 특별법으로는 진상규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 1차 조사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을 보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의 준사법권 부여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